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 기간: 2025.1.31(금) ~ 2025.2.6(목)

제공일시 2025 2 14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 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 기간: 2025.1.31(금) ~ 2025.2.6(목)

제공일시 2025 2 14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 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글로벌 정책

1. 美·中 무역전쟁 돌입... 중국산 '10% 추가 관세'에 '보복관세' 맞대응

- 미국과 중국이 관세 전쟁에 돌입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행한 중국산 제품에 대한 10% 추가 관세 조치가 유예 없이 4일(현지시간) 발효됨
- 이에 중국은 미국 IT 기업 구글에 대한 반독점 조사와 보복 관세 등 맞불 작전을 펼침
-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중국산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함. 행정명령은 이날 오전 12시 1분(한국 시간 오후 2시 1분) 발효됨. 이 행정명령에는 테무, 쉬인 등 전자상거래 업체를 규제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짐
- 중국 정부는 미국산 석탄과 액화천연가스에 15%, 원유·농기계·대배기량 자동차·픽업트럭에 10%의 수입 관세를 부과할 방침임

[\(더팩트 2025.2.4\)](#)

2. EU, 자동차산업 지원 '액션플랜' 약속... 규제완화 포함 주목

- 유럽연합(EU)이 규제와 경쟁 심화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자동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함
- 31일(현지시간) EU에 따르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운송정책 담당인 아포스톨로스 치치코스타스 집행위원에게 3월 5일까지 일명 '액션 플랜'을 마련하라고 지시함
- 집행위는 액션 플랜에 기술혁신·차세대 차량 개발 촉진, 실용적이며 예측할 수 있는 규제 체계 구축 등을 위한 조치가 담길 예정이라며 '규제 간소화'를 언급함

[\(연합뉴스 2025.2.1\)](#)

3. 日, 트럼프 LNG 확대 정책 환영... 알래스카 프로젝트 지원도 검토

- 일본의 주요 에너지 기업들이 트럼프 정부와의 손잡기에 나섬
- 일본 최대의 전력회사이자 LNG 구매업체인 제라(JERA)가 미국 트럼프 정부의 LNG 생산 확대 정책을 통해 에너지 안보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했다고 로이터는 31일(현지시간) 전함
- 일본 정부도 미국과의 잠재적 무역 마찰을 예방하기 위한 이유로 440억달러(약 64조원) 규모의 알래스카 가스 파이프라인 프로젝트에 투자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임팩트온 2025.2.4\)](#)

국내 정책

1. 녹색기업 혁신·저탄소 전환에 1.5조 보증 지원... “기후테크 육성”

- 정부가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녹색산업 보증지원을 강화함
- 1.5조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해 녹색 기술혁신과 저탄소 전환을 촉진하는 것이 핵심임
- 기존 중소·중견기업을 녹색기업으로 혁신하고, 스타트업을 중견기업으로 성장시키는 목표임
- 환경부는 5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녹색산업 보증지원 방안’을 발표함

[\(뉴스1 2025.2.5\)](#)

2. “항만에 데이터센터 지을 수 있도록”... 과기정통·해수부 협의

- 인공지능(AI) 모델·서비스 개발의 핵심 인프라로 꼽히는 데이터센터를 항만 내에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음
- 1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센터 건립 난항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 활동 관련 인프라와 전력 공급 시설이 잘 갖춰진 항만 부지에 데이터센터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해양수산부에 요청함
-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해양수산부 측에서도 시행령 개정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보였다”고 전함
- 다만, 데이터센터 건립을 위한 실제 항만법 시행령 개정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음

[\(연합뉴스 2025.2.1\)](#)

3. 내달 7일부터 은행·보험사·기금도 탄소배출권 거래

- 앞으로 은행과 보험사, 기금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에 참여할 수 있게 됨
- 환경부는 이런 내용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달 7일 시행된다고 밝힘
- 개정안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시장의 기능을 확대해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음
- 현재 배출권을 할당받는 기업(할당대상업체)과 시장 조성자, 배출권 거래 중개회사로 제한된 거래자를 은행과 보험사, 기관관리자, 투자매매업자, 집합투자업자 등으로 확대함
- 시장 참여자 배출권 거래와 신고를 중개회사가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됨

[\(서울신문 2025.1.31\)](#)

글로벌 기업

1. 테슬라, 일본에 '메가팩' 배터리 공급... 재생에너지 시장 공략 가속화

- 테슬라가 일본의 대규모 에너지 저장 시설에 배터리를 공급하며 일본 재생에너지 시장 공략에 속도를 냄
- 테슬라의 배터리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은 일본 에너지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이번 공급 계약을 계기로 테슬라의 일본 시장 진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4일(현지시각) 닛케이 아시아가 보도함
- 테슬라는 일본 금융서비스 그룹 오릭스(Orix)가 건설하는 대규모 에너지 저장 시설에 '메가팩' 배터리를 공급함

[\(글로벌이코노믹 2025.2.5\)](#)

2. GM, 멕시코산 트럭 미국 생산 검토... 기아 예의주시

- 미국 제너럴모터스(GM)가 '멕시코산' 트럭을 미국에서 생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미국과 멕시코 관세 전쟁에서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임
- GM과 더불어 관세 영향권에 놓인 기아 역시 미국 공장 활용을 통한 부담 완화를 고려하고 있지만, 멕시코 동반 진출 부품사와 수출 전략 등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 고심이 깊어지고 있음

[\(더구루 2025.2.5\)](#)

3. 아마존-이베르드롤라, 글로벌 재생에너지 협력 확대... 476MW 추가 확보

- 아마존이 스페인 에너지 기업 이베르드롤라(Iberdrola)와 476메가와트(MW) 규모의 신규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하며 재생에너지 협력을 확대함
- 3일(현지시각) 이베르드롤라는 이번 계약으로 양사의 파트너십이 총 5개국으로 확대됐으며,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신규 프로젝트가 포함됐다고 밝힘
- 아마존은 포르투갈 최대 풍력단지인 타메가(Tâmega) 풍력단지에서 219MW를 공급받기로 했으며, 해당 프로젝트는 2025년 초 착공될 예정임

[\(임팩트온 2025.2.4\)](#)

4. 세기의 기업통합 결국 빠걱... 혼다·닛산 합쳐 세계 3위 車그룹 탄생 무산 위기

- 일본 2위 자동차업체인 혼다와 3위인 닛산의 경영통합이 사실상 결별 수준으로 들어감. 닛산이 지난해 12월 체결한 경영통합의 기본합의서(MOU)를 철회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임
- 결정타는 혼다가 타진한 닛산의 자회사화 방안임. 이에 대해 닛산 내부에서 강렬한 반발이 일자 닛산이 혼다와 손을 잡는 대신 독자 생존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분석임

[\(매일경제 2025.2.5\)](#)

국내 기업

1. 현대차·기아 등 美 전기차 '충전동맹'... '아이오나' 운영 본격화

- 현대차는 5일 북미 전기차 충전망 구축을 위해 8개의 완성차 업체가 함께 설립한 조인트벤처 '아이오나'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더럼 본사에서 4일(현지시간) 개소식을 열고 충전소 운영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밝힘
- 아이오나는 현대차와 기아를 비롯해 BMW, GM, 혼다, 메르세데스-벤츠, 스텔란티스, 도요타 등 완성차 업체 8개사가 참여하는 북미 지역 전기차 초고속 충전 서비스 연합체임
- 아이오나는 전기차를 이용해 미국에서의 로드 트립이 가능하도록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계획임
- 이에 2025년까지 1,000기, 2030년까지 3만기의 충전기를 설치할 예정임

[\(서울경제TV 2025.2.5\)](#)

2. SKIET, '中 텃밭' 각형 LFP 분리막 뚫었다... 2900억 계약

- SK아이이테크놀로지(SKIET)가 파우치형과 원통형 배터리 분리막에 이어 각형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분리막 수주에 성공함. SKIET는 5일 2900억원 규모의 이차전지용 분리막 중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함
- SKIET는 오는 2030년까지 5년간 분리막을 공급할 예정임. 계약을 체결한 고객사는 비밀 유지 조건에 따라 공개하지 않음

[\(이데일리 2025.2.5\)](#)

3. "완전무탄소 선박 실현" 한화, 베이커휴즈와 '암모니아 가스터빈' 공동개발

- 한화오션과 한화파워시스템이 글로벌 에너지 기술 기업 '베이커휴즈(Baker Hughes)'와 손잡고 세계 최초로 무탄소 선박 추진 체계 개발에 나섬
- 이번에 공동 개발할 암모니아 가스터빈은 100% 암모니아 연소가 가능할 뿐 아니라 필요에 따라 암모니아와 천연가스를 자유롭게 혼합해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될 예정임

[\(NBN뉴스 2025.2.4\)](#)

4. 씨에스윈드, '1610MW 규모' 獨 해상풍력 발전단지에 접합 구조물 공급

- 씨에스윈드가 독일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참여함. 하부구조물과 타워 간 접합 구조물인 트랜지션피스(TP)를 공급하며 해상풍력발전 단지를 조성함
- 4일 업계에 따르면, 씨에스윈드(CS Wind) 자회사 씨에스윈드 오프쇼어(CS WIND Offshore)는 최근 스웨덴 에너지 기업 바텐폴(Vattenfall)과 독일 북해에 위치한 노르드리히트(Nordlicht) 1, 2호 해상 풍력발전소를 위한 112기의 TP 공급 계약을 체결함. 1호에 들어갈 68기와 2호의 44기는 덴마크에 있는 씨에스윈드 오프쇼어 생산시설에서 제조됨

[\(더구루 2025.2.4\)](#)

인도, 원자력법 완화 추진... SMR 연구개발에 3.4조원 투입

- 인도 정부가 원자력 산업 성장을 촉진하고 민간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원자력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함
-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의 보도에 따르면, 니르말라 시타라만 인도 재무장관은 원자력을 활용해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구상을 밝혔음
- 인도 정부는 그동안 외국 기술 공급업체의 진입을 가로막아 온 원자력손해배상법(Civil Nuclear Liability Law)을 개정할 방침임 현행법은 원전 사고 발생 시 운영사뿐 아니라 설비 공급업체에도 책임을 부과해 글로벌 원전 기업들이 인도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부담이 컸음
- 해당 법령은 보팔 참사로 알려진 1984년 인도 중부 도시 보팔에서 일어나 유니온 카바이드(Union Carbide) 화학 공장 가스 누출 사고 이후 도입된 것으로, 사고 발생시 피해 보상을 강화하는 취지로 제정됐음
- 인도는 1974년 핵실험 이후 국제 제재를 받았지만, 2008년 미국과의 협정을 통해 인도는 외국 원전 기술 및 연료 도입이 가능해졌음. 그러나 엄격한 배상 규정으로 인해 GE히타치(GE Hitachi Nuclear Energy)는 인도 원전 사업 계획을 철회했으며, 프랑스 전력공사(EDF)와 웨스팅하우스(Westinghouse Electric)의 사업 부지도 수년째 방치됐음
- 시타라만 장관은 민간 기업이 원자력 발전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제안했음. 현재 인도 원전 사업은 국영기업인 인도원자력공사(NPCIL)가 독점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KPMG의 글로벌 에너지·자원·화학 부문 책임자인 애니쉬 데는 “원전 확대를 위해서는 기술, 연료, 안전, 손해배상, 비용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원자력 발전의 방향성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원자력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인도는 2047년까지 원전 설비 용량을 현재보다 12배 증가한 100GW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시타라만 장관은 이번 발표에서 정부가 소형모듈원자로(SMR) 연구개발에 2000억루피(약 3조4000억원)를 투입하겠다고 밝혔음
- SMR은 건설 기간이 짧고 전력망 수요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차세대 원자로로, 인도는 2033년까지 최소 5기의 자체 개발 SMR을 운영할 계획임
- 그러나 이번 조치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음. 인도 증권사 아리한트 캐피탈 마켓(Arihant Capital Markets)의 슈루티 자인 최고전략책임자(CSO)는 “원자력이 저탄소 에너지원이기는 하지만 환경 및 안전 문제로 지속가능성이 제한적”이라며, “태양광과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투자를 병행해 인도의 환경 목표를 균형 있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음

[\(임팩트온 2025.2.3\)](#)